

월요객석



이영호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현 정부의 일관된 에너지정책이 필요

후보 초청 정당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공약사항으로 발표가 되었고 다양한 문제점들도 동시에 논의가 되었다.

현재, 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혼론에 임각하여 세밀한 정책들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며, 학회의 전문가적 활동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이다.

원자력계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정책으로 전력수급에 크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당분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2020년 대 중반에 필요하면 가스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가스발전소를 증설하거나 석탄발전 억제 정책을 조절하면 된다.

또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을 억제하면 전기요금에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많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지금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요금이 폭등한다면 어떤 정권도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죽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단위생산 전력당 재생에너지의 설비투자비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은 큰 문제가 안된다. 최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전원별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2022년부터 가동되는 신규발전소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도 전력공급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량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을 확대할수록 토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지붕, 수면, 유휴지를 활용하면 임야와 농지의 일부만 활용해도 상당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보급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에 대해서도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이 많다. IEA에 따르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5~20%까지는 전력계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958년 출생 ▲한국해양대 기관공학 졸업 ▲AFORE2016 공동의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해양대 교수

현 정부의 공약과 정책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부문이다. 새 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증설을 억제하는 대신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원자력계는 이러한 안전과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후보 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한결 같이 탈원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큰 틀에서 주장하였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는 새 정부가 소수의 주도로 독단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대부분의 정당이 탈원전 및 탈석탄 공약을 제시했고 오래 전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우선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 온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와 민주당이 숙고해서 수립한 정책이다.

社 說

전력수요 예측, 에너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가 예전의 예측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그동안 과다 예측을 한 것이란 논란과 함께 신규 석탄과 원전 건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어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분야를 뺀아들이는 이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다. 하지만 13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수요전망 워킹그룹에서 발표한 중장기 수요 예측은 사안에 따라선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된다.

워킹그룹은 2030년까지의 전력수요 예측에서 2년전 보다 무려 11.3GW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용량은 100만kW급 원전 1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한 후 수요에 맞춰 발전설비를 집

어넣는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해 왔다. 사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하락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 2013년 이후 전력판매량이 평균 1%에 접어들어 반등의 기미가 없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에 2030년 최대부하가 113.2GW에서 101.9GW로 예측 됐다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다. 전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정부 정책의 불신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아파트 구내 전기설비는 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많은 시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전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탓인지 서울 목동, 시흥동, 둔촌동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전피해 신고가 잇따른다.

또 한전이 전력공급을 책임지고 있지만 책임한계점을 넘어서는 개인설비에 대해서는 각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데 우리는 전기공급은 100% 공기업인 한전에서 책임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파트에 한전은 발전차를 임대하고 밤샘 작업을 해서 16개동에 대해 순차적으로 전기를 공급했는데, 현장 작업을 했던 직원들에 따르면 왜 다른 동부터 전기를 공급하느냐며 항의가 많았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저비중 7%가 통신비라는 통계가 있다. 여기에 비하면 4인 가족 평균 5만 50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은 통신비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주의 특이소식 "갑질로 제재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기업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임원진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기업자이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인"이라며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른바 '을의 갑질'에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단체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회원사들의 권익 증진이고 둘째는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 역할이다"라며 "이러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힘써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 닦아주기가 공정위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정위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들이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칼럼 내용은 본 신문의 論調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CEO를 위한 자산관리 ② 회사를 위해 평생을 버쳤건만 퇴직금 0원 이라니!(상)

전기설비업을 운영하는 김 사장과 동고동락했던 후배 김 부장이 회사생활 20년을 기점으로 퇴직을 하게 됐다. 김 부장은 회사발전에 공로한 만큼 20년 동안 쌓였던 퇴직금을 받아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했고, 여기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그나마 노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김 부장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본인의 국민연금과 배우자 공무원연금이 합쳐지면 노후생활은 평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 사장은 김 부장 만큼 노후준비에 있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대표 및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해야한다. 업무를 지시받는 임원의 경우는 별도의 퇴직금규정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지급한 퇴직금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 X 10% X 근속연수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며,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전북익산의 A사장은 회사 설립시 친한 친구들과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휴일도 없이 30년 동안 회사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 업체를 통한 생산과 수입으로 A사장의 노력 만큼 회사의 성장은 지속되지 않았다.

주와 동료들과의 불화로 회사경영에서 물러나고, 강제로 퇴직하게 됐다. 이후 퇴직한 상태에서 그동안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공로와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 그 이유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대표포함)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산책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인 단체 회장 및 임원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영세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을의 갑질' 화두를 꺼내 들었다.

열핏 보기엔 말이 안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경제구조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보다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이다.

우리말 중에 가진 자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말로 '갑질'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을까

싶다. 흔히들 갑질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리는 횡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구조 속에서 '갑질'은 대물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기업을 뒤흔다며 중소·소상공인을 만난 김 위원장이 작심하고 꺼내든 말이

김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노라니 얼마 전 자칭 '장'의 자리에 있는 한 지인이 했던 말이 오버랩된다.

"지독하게 굴던 거래업체 담당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업무상으로 연락하는 것도 짜증이 날 때가 많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이

을의 갑질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안에도 갑과 을을 넣어 병, 정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면서 갑질의 대물림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 공정위 활동에 대한 자기반성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말은 목직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사람의 개인메신저 프로필이야. 가족의 제일 예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세상 좋은 말들을 올려둔 걸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일텐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에 더욱 속이 상하더라고."

조정훈 기자 joh@

YOKOGAWA, MULTI, MUSASHI 취급점 (주)현대전기계측기. Multi 누설전류계로 비교측정. Multi 누설전류계 MCL-800D. MULTI 누설전류계. 비접촉식 온도계. 2100(Φ55) AC 0~2000A. 260(Φ55) AC,DC 0.01~2000 A. DIGITAL 소음계(320) 35~130db. DIGITAL 조도계(1065) 0.1~20,000. 다기능계측기 MET500. 거리측정기. UR1800온도기록계. 내전압시험기 50KV,70KV,100KV. HD8510 리레이테스타. HD55 OT테스타. OT 산가측정기. 3235 접지저항계 0~1000Ω. 2343 02 후쿠메다 650V~1,000A. DIGITAL 절연저항계 250V, 500V, 1000V용. 3207 POLY TESTER. HD55 OT테스타. OT 산가측정기. 3235 접지저항계 0~1000Ω.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태성B/D 106호 TEL: 2279-0427, 2278-3944 FAX: 2273-8758